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김 서 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 동 대학원 신문학 석·박사
-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월간 「말」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
- 저서 및 논문 : 「세계언론법제동향」,
「1990년대 언론 산업의 변동과 언론법제의
변화」, 「신문의 성격과 보도 경향의 관계 -
두뇌한국 21 사업과 교육법 개정을 중심
으로」 외 다수

1. 제목의 중요성과 그 (역)기능

신문을 읽는 독자나 기사를 쓰는 기자나 기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고서는 그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신문마다 제목을 강조하고, 편집을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사를 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제목이다. 또 정보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은 어느 특정 지면만을 보거나 주제목이나 소제목들을 보고 기사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이 내용을 결정해버리는 일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강준만, 231쪽).

그래서 제목 달기는 매우 중요하다. 제목은 기사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임영호, 225쪽). 첫째,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기사를 읽게 한다. 둘째, 제목은 기사요지를 압축해서 전달한다. 셋째, 제목은 뉴스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중요한 뉴스일수록 크고 눈에 잘 띄게 제목을 뽑는다. 넷

째, 제목은 신문 지면을 보기 좋게 꾸미는 기능도 한다. 제목의 모양은 신문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제목은 기사의 분위기는 물론 신문의 색조, 즉 성향까지 드러낸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작성된 제목이라도 제목 자체가 가지는 자수의 제약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박유봉 외, 236쪽). 그래서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고, 기사 성격에 맞게 부쳐져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 편파적이거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애매한 표현의 제목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기자의 주관적 의견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까지 서술한대로 기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을 잡아 두어야 하는 상업적인 이유, 특정 방향으로 독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제목이 왜곡되고 독자들을 오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정적이고 과장이 심한 제목은 객관적이고 요약적인 제목보다 독자들에게 높은 유도력을 지니지만 기

언론의 상업적 이유, 정치적 이유,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제목이 왜곡되고 독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 전체 내용을 잘못 인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앞서 언급한 기사 제목이 지닌 기능들은 전문적으로 제대로 작업되었을 때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작업되지 않았다면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워지며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결국 독자나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과 의견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윤영태, 28쪽). 고스란히 독자나 시청자의 피해인 것이다.

독자들의 오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사의 취재 대상이 입는 피해로 귀착한다. 신문은 사회 제 세력들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일반의 오해는 그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신문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소개하는 사진을 실었다. ‘벚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남자가 벚꽃 나무 아래로 걷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곧 결혼을 앞둔 직장 동료 사이로 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것이었다. 불륜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사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해당 신문사 지면에 게재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받은 인식이 쉽게 사라질까? 물론 이 예는 무책임한 사진기자와 편집기자의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제목달기를 통한 왜곡 현상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의도적이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가치 지향적 언론들에 의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 기득권의 방어, 상업적 선정성의 극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신문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오도된 제

목의 문제점을 그 의도에 따라 분류하고 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후 문제점의 성격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볼 것이다.

2. 왜곡된 제목달기의 사례와 피해

왜곡된 제목 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역기능을 다 망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사 내용과 제목의 왜곡 형태에 따라 그 역기능의 피해는 천변만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 언론 환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신문들이 사람의 관심을 간편하게 끌 수 있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선정성, 폭력성, 갈등과 대립, 참사 등이다. 즉 대부분의 제목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기사의 내용보다 더욱 증폭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윤영태, 28쪽). 이러한 요인들에 우리 사회의 특수 상황인 남북대치, 권력과 언론의 대립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념 관련 기사, 정치적 성향 기사, 신문사의 이념과 관련한 기사, 신문의 자사 이익과 관련한 기사,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향 반영 기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체제 이념 관련 기사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실제 사망 이전에 여러 번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외국의 오보나 유언비어를 기사화하여 대서특필했지만 사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단신기사 처리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적성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은 북한 관련기사에서 곧잘 벌어진다.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ㄷ일보의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사안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다.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국민 정서를 자극한 『태극기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것』(2000년 5월 31일자)이라는 기사는 특히 그렇다. 남과 북은 남북 공연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주체성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ㄷ일보 기자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 결국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해 무시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진실이 무엇이든 주어진 현상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상황은 북한과 당시 정부에 적대적이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이념 관철을 위한 사례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김일성 사망설 같은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 행사에 대한 시비 형태로 나타난다. 2001년에 있었던 8·15 방북단이 보여 주었던 몇 가지 돌출행동에 대한 보수 신문들의 반응이 그랬다. 이 사건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의 일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재 편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ㄷ일보나 또 다른 ㄷ일보는 『괘씸죄 정도로 국민 비난 여론 잠재우기 어렵다』(2001년 8월 18일자 기사 본문 중), 『별 것 아니라고』(2001년 8월 23일자 사설), 『국기를 흔드는 방북단의 돌출 행동』(2001년 8월 24일자 1면 기사) 등에서 방북 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의미 규정하고 은근히 강경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ㄷ일보의 경우처럼 사법당국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사 중에 들어 갈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별 것 아니라고』와 같은 제목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신문들의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보수 언론에서 남북 교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보인다. 북한 방문단이 현충원을 참배하였던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남쪽 방문단이 북쪽에 가서 김일성에게 참배할 것을 염려한다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ㄷ일보의 참배관련 기사는 점입가경이다. 대다수의 신문들은 예상과 달리 10초간 묵념으로 끝난 북 참배에 아쉬움을 보냈지만 『55년간의 상처... 5초간의 묵념』(2005년 8월 15일자)과 같이 선정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55년과 대구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짧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ㄷ일보에게만 5초였다. 편집자는 편집의 묘미라고 흡족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참배가 남북 교류의 새 지평이 열리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함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마치 북측이 5초간의 묵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에 독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기사의 정점은 ㄷ일보의 『60년 전으로 돌아가나...』(2005년 8월 15일자)라는 기사였다. 『광복절에 김정일과 추종세력들 굿판』,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위기』라는 부제와 함께 찬탁, 반탁 갈등의 60년 전을 연결시키는 기사는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의도를 말하기에 앞서 흥분하고 있는 자신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했다. 정식 교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참배한 북한 대표단을 향해 '굿판'을 운운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기사화한 본문 내용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2) 정치적 성향 관련 기사

체제 이념 관련 기사, 정치적 성향 관련 기사,
선거 보도 기사 등에서 언론사의 의도, 왜곡,
선정성 등이 담긴 제목 드러나는 경우 많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이모 씨의 사건에 관한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본인도 가담을 확인한 사실이니 이모 씨가 인수위에서 활동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 그러나 이를 인수위 성격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임을 몰랐던 이모 씨가 인수위에 포함되었던 것을 사실(2월 28일자)에서 『공안사범이 인수위에 따리를 틀다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오류를 지나 인수위의 성격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의 표현이자, 권력과 갈등관계가 같이 표현된 사례였다.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언론 보도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집한 국정토론회를 보도하는 보수 언론의 보도에서 신문들이 자사 신문을 이용해 권력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볼 수 있다. 『건전 비판 수용 주장하다 정통부 차관 면박 당해』, 『사무실 기자 출입 대통령이 막아야』 등 제목만 보면 대통령은 극도의 대 언론 혐오증 환자 아니면 독재자인 것처럼 인식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박한 정통부 차관 발언은 건전 비판 수용 부분이 아니고,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자는 부분이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목은 아니다. 기자 출입 문제는 각 부처가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처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으려고 해도 장관이 언론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외교안보연구원장의 발언이었다.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은 옳지 않은 것이다.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다 하여 업무 중인 사무실에 무

단출입하여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보인다.

3) 선정적인 선거 보도

신문들의 선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 중의 하나가 선거 보도이다. 선거 기간에는 무책임한 폭로성 정보가 난무하고, 온갖 의혹이 제기된다. 언론은 일차적으로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전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첫째 이유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2001년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정치판은 물론 국민들도 혼란과 절망의 상황이었다. 각종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폭로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당시 정권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감도 증대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폭로 기사가 언론들의 일면을 장식했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강력했다. 정치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급격히 감소했다. 아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루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닐 테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상업주의 성향, 권력화 현상 등이 교묘하게 어울려서 빚어 낸 결과이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 백궁 정자지구 개발, 김홍일 씨와 여운환의 관계, 노랑진 수산시장 입찰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 기사들에서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정치권의 주장과 일부 밝혀진 사실의 부풀리기를

통해 작성된 기사였다.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하려 했던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 시 여권 실세 개입설이 한나라당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석간의 기사로 나갔던 것은 받아쓰기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제목들은 당시 의혹들을 기정사실처럼 묘사했다. 설사 의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누구나 사실임을 믿도록 암시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1면 기사감이며, 더 기사화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은 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했다. 언론이 취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로를 받아쓰는 관행에 머물러 있었음은 정치권의 발언이 없자 기사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던 당시의 모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이 정보원, 출입처에 의해 홍보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그렇다면 언론이 홍보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기사를 받아썼을까. 언론의 상업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정치적 현안은 매우 복잡하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도, 기사를 만들기에다 복잡하다. 반면 정치권의 비리만큼 충격적이고 쉽게 호기심을 자극할 사건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 언론사가 받고 키울 것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기사화가 과연 정당한가? 혹 언론의 속보성을 들어 변명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의 사건들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던가? 결국 내용은 의혹이었지만 제목만 본 많은 독자들은 그 많은 의혹을 사실로 믿었을 것이다.

언론들이, 특히 신문들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 폭로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권력화 된 언론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도 신문들의 과장보도는 제목을 통

해서 드러났다. 신문들은 대선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이회창 - 정몽준, 노무현표 더 가져가』, 『40대 지지, 한달만에 노(盧)서 이(李)로』, 『40대 지지율 이(李) 43% - 노(盧) 34%』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제목을 달았으며 이회창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내용 (예컨대, 3자 가상 대결시의 지지도, 경제문제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것 등)만을 그래프화시켜 첨부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가상대결 전망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편향성이 뚜렷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물론 나중에 노무현 후보의 반전에 대해 별도로 보도하지 않았던 이들 신문의 보도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보도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퍼센티지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완전히', '더욱' 등의 수식어를 제목에 남용하여 보도하거나, 무응답층이 많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크게 다루는 등 편집에 있어 '편파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우세를 눈에 띄게 보도하거나 특정 지역의 민주당 지지를 하락 사실을 크게 보도하는 등 지나치게 특정 후보, 특정 당 편들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보도가 제목의 미술이었다고 하겠다.

4) 신문의 사회적 지향의 표현

우리 신문들은 특정집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면, 또 다른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전교조나 시민운동에 대한 태도 등이 그렇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로 조사를 받던 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먼저 언론들은 이전에도 익히 보였던 기민한 '과감성'을 발휘하였다. 교장의 자살이 알려지자 교장이 왜 자살했는가에 대해 차분히 따져 보기도 전에 교장의 자살 원인에 대해 '언

신문의 사회적 지향이
기사의 제목에 반영돼
표현되는 경우 많아

론제판’을 행하였다. 『전교조 사과요구에 고민 초등 학교 교장 자살』(7일보, 2003년 4월 4일자), 『전교조와 갈등 초등학교장 자살, 학교 홈페이지 잇따른 비난글에 시달려』(2일보, 2003년 4월 5일), 『교권침해 사과요구 받은 초등학교 교장 목매 자살』(8일보, 2003년 4월 5일) 등의 제목을 일제히 달았다.

물론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초등학교 교장이 전교조의 사과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자살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의 제목들을 본 독자는 대부분 전교조의 사과요구에 시달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8일보는 아예 『전교조의 사과요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규정해버렸다.

이후 전교조와 서 교장이 합의했고, 교감이 합의를 거부했으며 교장단 회의에 갔다 온 이후 교장이 자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이 교장이 고민하다 자살하게 된 이유라고 ‘시나리오’를 써 볼 수는 없을까? 이전의 추측 보도 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사실’들은 주어졌다. 그런데 전교조의 추론에 대해 2일보는 사실을 통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사건의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언론들은 제목을 통해 추측을 확산하였으면서 전교조에게는 그런 추론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2003년 5월 2신문은 『갈등 커지는 새만금사업 / 보존이나 개발이나...정면충돌 태세』라는 기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찬반 진영간 세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며 갈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찬성, 반대 두 집단의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물론 이 두 집단의 시위만을 놓고 보면 대립 갈등이요, 세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의 주

장이 가지는 명분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분명히 양자의 주장에 논리적 설득력이 차이가 있음에도, 동등하게 간주하여 언론에 대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판인 대립 갈등 구도로 몰고 가는 양시양비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기사에서는 대안은 많으나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안 없이 주장만 있는 집단의 갈등으로 새만금 문제를 호도할 위험이 있는 기사였다. 새만금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논조로 볼 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당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위해 ‘새만금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또 다른 신문 역시 많은 기사에서 새만금 문제를 환경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03년 6월 7일에는 『이익단체 세(勢)대결 “이젠 국회로”』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증권집단소송, 공무원 노조, 생명윤리법안 등 사회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의도가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 전장(戰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쪽에 선 갯벌의 보존을 요구하는 ‘3보 1배’ 행군이, 다른 한쪽에서는 간척사업 강행을 촉구하는 썰기대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도했다. 전술한 지적처럼 그 사안보다는 대립 갈등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사회 정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장, 세와 같은 용어가 들어간 제목이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5) 신문의 상업적 속성

신문들은 선정적인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물론

이는 독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 내용 전달보다는 갈등을 드러내 사람들의 관심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육부와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여부를 두고 대립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사안은 교육부의 정책이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우수 학생만을 뽑겠다는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가 반 미래지향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대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는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우선 여지없이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다. 이 사안에 '도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이 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통령, 여당, 서울대 등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거나 전면전, 진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의 논술시험을 본고사로 볼 것이냐의 여부, 본고사가 필요하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ㄷ일보는 서울대의 반응을 옹기면서 『진압이라니 ... 우리가 범죄자냐』(2005년 7월 8일자)를 제목으로 뽑았다. 물론 작은 제목과 내용은 서울대 안이 본고사가 아니라는 서울대측 설명이다. 흥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당정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기사에 『전면전 선포』란다. 물론 당시 서울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에서 『폭언인사가 주도하는 정책에 절망』(2005년 7월 8일자)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아내는 ㄷ일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ㄷ일보는 사실 제목을 『대학입시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뽑았다.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보

다 더 좋은 비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부가 주장하는 3불 정책은 당시 정권이 내세운 것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지향해온 정책방향이였다. 그것도 모르고 교육문제를 다루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대립 갈등 구도의 선정적 보도 태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목 달기가 이루어 낸 결과이다.

굿모닝 시티 윤 회장의 로비 사건도 역시 기사와 제목이 따로 놀았던 사례 중 하나이다. 의혹이 있는데 당사자는 부인한다는 매력적인 기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부인 내용이 있어도 제목은 의혹이요, 의혹의 확산이다. 이 기사 역시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특종강박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ㄷ일보가 보도의 기초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뭔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검찰도 부인하고,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줄 문서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ㄷ일보는, 보도 당시로서는 100% 사실이라고 믿을만 했지만, 오보로 밝혀지면 대대적인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보도 다음날에는 『'굿모닝 돈 수수설' 일파만파』(2003년 7월 17일자)라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의 부인 인터뷰 기사를 신기도 했다. ㄷ일보의 뒷심이 딸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미 나갔다. 결국 윤 회장의 로비에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특종강박증'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6) 자사의 이해가 달린 보도

언론들이 자사의 이해가 달린 보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일수록 사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

신문들의 상업적 속성이나
신문사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사 제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

는 기사 본문과 제목의 괴리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신문들이 이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례가 세무조사 시기이다. 2001년 대통령이 연두 성명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한 이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연이어 시작되었다. 언론사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큰 신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연일 기사와 사설로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한 신문은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조사들을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반영하고 있다. 2001년 2월 11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DJ’ 언론 발언록을 기사화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오다 집권 이후에는 정책 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아마도 그 신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 마음이 기사 제목 추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신문이 새로 시작한 미디어면 첫 날, 언론사의 제정과 납세에 관해 다루면서 『한겨레 - 대한매일 등 5개, 97 ~ 99년 법인세 납부 “제로”, 95 ~ 99년 법인세 조선 633억, 중앙 426억, 동아 141억 납부』라는 제목을 뽑았다. 5개 신문사는 탈세했고 조선, 중앙, 동아는 성실 납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이 그런 인식의 왜곡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신문의 기사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익을 남기는 좋은 신문 조·중·동, 이익도 못 남기는 5개 신문’으로 해석된다. 그게 그렇게 강조해야 할만한 상호 비평의 내용인가. 또 이익을 남겨야 좋은 신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였다. 언

론사 세무조사가 탈세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것이 이익 더 남긴 좋은(?) 신문인가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제목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분명히 자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는 변화한다. 2003년에는 미국 방송 시스템의 규제 완화가 관심대상이었다. 왜 미국 내 방송 정책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까? 그것은 선진국의 사례에 ‘맹종’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미국 내 비판도 소개하고 있고 아직 우리 사회의 주장으로 전염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추종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로 우리 사회를 압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문들의 기사 제목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미래 주장을 엿보게 하는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었다. 중립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제목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美 언론 ‘약육강식’ 시대로,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파장』(기신문),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결정/미 상원, 원상복귀 방안 고려』(흥신문) 등 우려를 전달하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美 FCC 신문 - 방송 동시소유 허용] “뉴미디어 고속성장”』(디일보)처럼 그 장미빛 미래를 예측하는 제목도 있다. 더 나아가 기신문의 시론은 『또다른 폭거’美 언론소유 완화』인데 디일보의 시론은 『미디어 통합의 시대』이다. 1990년 후반 방송법 개정 논쟁에서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원했던 신문사들의 이해관계가 다시 등장하는 듯한 예였다.

3. 대안은 없는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고, 상업적이며, 이념이 강한 신문들이 권력화했

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언론 구조의 개혁이다. 사유화해가고 있고, 권력으로서 일정한 이념을 지향하는 신문들의 행태를 바꾸지 않고서 제목에 의한 왜곡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 역시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들이다.

1) 언론구조의 개혁

전술한 바와 같이 신문들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통제가 약해지면서 상업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증대하는 권력화 현상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사 제목의 왜곡을 악용하기도 하고 둔감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극복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해 온 언론개혁 논쟁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주의 영향력과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소유 지분 제한의 문제이다. 언론이 (대)자본에 종속됨으로써 자본에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논리는 방송사의 대기업 참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계열 기업 및 사주 그리고 그에 피용되어 있는 자는 일간신문과 통신사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김승수, 1998; 박형상, 1998; 김중서, 1996).

과거 정간법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3조 3항)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49%를 소유하고 대기업 소유주가 개인 자격으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지금은 분리하였지만 삼성이 중앙일보, 현대가 문화일보, 한국화약이 경향신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했었다.¹⁾

공적 매체이어야 할 신문을 1인 또는 소수가 장악하여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소유 지분을 제한하여 일반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가 구성한 언론개혁정책위원회(1997, 27-29쪽)는 방송법에서 방송사 최대주주의 지분 한계를 30%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도로 신문사의 소유 집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 논의가 정간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심이 되는 외부의 간섭과 내부의 기업 소유주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편집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보호, 즉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 알 권리의 충족과 언론이 수행하는 공적 임무를 통한 민주주의의 준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명구·이광진, 97쪽). 이러한 인식 아래 현재 신문법의 편집권 관련 조항을 권고(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취재편집 종사자가 자유로이 취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문을 제작할 때 제

1) 예를 들어 문화일보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47.2%를 소유하고 나머지를 정주영, 정세영, 정몽준이, 경향신문은 한화화학이 49%를 소유하고, 김승연이 49.98%를, 중앙일보는 삼성 계열기업들이 42.51%를 소유하고 이진희와 전·현직 임원들이 나머지를 소유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언론구조 개혁 등의 대안을 바탕으로
기사 제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목 왜곡을 통한 기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2) 신문윤리강령의 구체화

하지만 언론구조의 개혁은 그 효과가 큰 만큼 제도적 실현이 쉽지는 않다. 그 점에서 제목달기와 같은 언론행위는 언론사의 조직목표(예를 들어 수익극대화), 직업적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목의 문제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매일 접하는 기사의 제목은 현재 우리 언론의 질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윤영태, 29쪽)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당면한 상황에서 몇 가지 변화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신문윤리강령 구체화 같은 자율 규제 강화이다(조용철 외, 299·311쪽 참조). 미국 직업 저널리스트 협회 시그마델타카이 윤리강령(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igma Delta Chi, code of Ethics)에 따르면 정확성과 객관성 영역에 “4. 신문의 제목은 기사 내용으로 완벽하게 실증되어야 한다. 사건 및 TV 방송은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사소한 사건을 앞 뒤 없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현재 제목 왜곡의 정곡을 찌르는 조항이다. 이러한 직업윤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로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부의 무언의 질서에 항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신문·라디오·TV 윤리강령 역시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라’ 항목에서 “3. 신문제목, 리드의 내용은 기사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 역시 신문윤리강령은 아니지만,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사실의 요약과 표제에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윤리강령의 수준으로 그 권위를 강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더욱 큰 변수는 윤리 강령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으며, 위반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법적인 대응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재판하면서 제목만을 별도로 판단하는 사례는 있기 어렵다. 다음의 판결 내용이 보여 주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하지만 여기서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라는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면 언론학에서 제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목은 현실에서 많은

독자들이 기사를 접하는 최소 단위이자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인식하는 전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헤드라인이 본문에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경우, 헤드라인이 본문을 과장한 경우, 헤드라인이 본문의 일부만을 드러내어 왜곡한 경우, 본문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헤드라인 자체가 위법한 내용일 경우 등등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목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목 왜곡의 전형인 의견의 형식을 띠고 있을 경우는 오히려 언론의 논평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효한 판결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이 정립되면 그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중재 절차도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판에서 제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 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한다며 이는 언론이 의견과 평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원용하면 제목이 본문과 무관하게 단순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본문의 일부를 과장하여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문에는 사실이 충분히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제목만 읽은 독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목에 따르는 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은 제목만을 겨냥한 판사가 아니며 제목만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제목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판례가 성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준만(1993). 「권력과 언론」. 학민글밭 57. 학민사.
 김승수(1998). 「신문 산업의 회생과 개혁을 위한 제안」. 언론개혁정책토론회 자료집. 39 ~ 52쪽.
 김종서(1996). 「신문규제 입법의 필요성 - 내용과 한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세미나 자료집 신문법제의 개선방향. 15 ~ 39쪽.
 박유봉·서정우·차배근·한태열(1987). 「신문학이론」. 박영사.
 박형상(1998). 「언론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 언론개혁 심포지엄 자료집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 33 ~ 44쪽.
 언론개혁정책위원회(1997). 「언론개혁 10대 과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윤영태(2006, 11). 「폭력 갈등 대립 등 내용보다 증폭된 제목 달아 - 무엇이 불량제목인가」. 신문과 방송.
 이명구·이광진(1996). 「언론기업 내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2집.
 이철기(2005, 6).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과제 - '북한 핵실험 준비설'의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인터넷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5. 6. 9.
 임영호(2005). 「신문원론」. 한나래.
 조용철·김진홍·송정민(2000). 「취재와 기사작성」. 양지.